



少子化対応と無償化方策—2022 年第 209 回～2023 年第 211 回の国会審議にみる「教育無償化」論議の経緯と特徴—

渡部, 昭男
梁, 洙京

(Citation)

日本教育学会第 82 回大会

(Issue Date)

2023-08-24

(Resource Type)

conference object

(Version)

Version of Record

(URL)

<https://hdl.handle.net/20.500.14094/0100482899>



저출산 대응과 무상화 방안

—2022년 제 209 회~2023년 제 211 회 국회 심의에서 보는 「교육 무상화」 논의 경위와 특징—

○와타나베 아키오 (오사카 세이케이 대학 · 특별초빙교수)

서론. 국회 심의에서 보는 「교육 무상화」 논의 분석—과제 · 대상 · 방법

교육 무상화 논의가 언론에서 성행한 것은 교육 무상화 개헌론이 나온 2016년이다. 2016년 제 190 회부터 「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」(일본 헌법 제 41 조)으로 여겨지는, 국회에서의 교육 무상화 논의 경위와 특징을 밝히기 위해 국회 심의 분석을 시작하였다. 본 학회에서는, 제 201 회(2020. 1-6)@제 79 회 대회, 제 203 회(동 10-12) 제 204 회(2021. 1-6)@제 80 회 대회, 제 205 회(동 10) 제 207 회(동 12) 제 208 회(2022. 1-6)@제 81 회 대회에서 보고했다. 본 보고에서는 제 209 회(2022. 8. 3-5/제 26 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결과에 따른 소집으로 실질적인 심의 없음), 제 210 회(2022. 10. 3-12. 10), 제 211 회(2023. 1. 23-6. 21)를 대상으로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<https://kokkai.ndl.go.jp/#/>을 이용하여 「이차원 저출산 대책」, 「교육 무상화」, 「저출산, 무상화」 등으로 검색하여 나온 곳을 중심으로 파악하고, 특히 저출산 대응 및 무상화 방안과 관련된 논의 경위와 특징을 밝혔다.

1. 기시다 후미오(岸田文雄) 총리의 「이차원 저출산 대책」 연두 회견 및 시정 방침 연설을 둘러싼 반향 논의

기시다 수상이 연두 회견(2023. 1. 4)에서 말한 「이차원 저출산 대책」은, 제 211 회 국회 심의에 있어 커다란 테마의 하나로 떠올랐다. 이 용어는 국회 회의록에서는 이전에도 4 건(2014·187 회, 2019·198 회, 2022·208 회, 210 회의 각 1 건)이 검색되었으나, 211 회에서는 100 건 203 개소(2023. 7. 13 현재)가 되었다.

「이차원 금융완화」(2013. 4 쿠로다(黒田) 총재 회견)가 2013년 제 183 회 회기 도중부터 국회 회의록에 처음으로 등장해 305 건·540 개소(4~6 월 3 개월간)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, 「이차원 저출산 대책」에 대해서는 수상 자신이 「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」으로 말을 바꾸는 등 임팩트가 부족했다(「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」도 덧붙여 「or 검색」으로 118 건 271 개소/본회의 22 건, 예산 위원회 26 건·공청회 7 건, 후생 노동 위원회 18 건 등). 1/23 시정 방침 연설에서는 「어린이가 먼저인 경제 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반전」 「어린이 가정청 아래에서 현재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아동·육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」 「6 월 기본 방침까지 장래적인 아동 육아 예산 배증을 향한 큰 틀을 제시」라고 말했지만, 재원의 명확한 뒷받침은 없었고, 국회 심의에서는 그 진의나 진심도에 질의가 집중되었다.

2. 「이차원의 저출산 대책」 관련 특기 항목 및 급격한 저출산에 관련된 현상 인식

국회 심의와 병행한 「이차원 저출산 대책」과 관련된 특기 사항은 부표와 같다. 2/28 속보를 바탕으로 3/31 시안에서는 「지난해 출생자 수가 80 만명 아래로 떨어져 사상 최소가 될 전망이다. 정부 예측보다 8 년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」며 「2030 년은 저출산 대책의 분수령」, 「2030 년대에 접어들면 우리나라 젊은 인구는 현재의 배속으로 급감」 「앞으로의 6~7 년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」라는 인식을 제시했다. 그리고 아동·육아 정책의 기본 이념에 「①젊은

2023. 1. 4	기시다 수상 연두 회견 「이차원 저출산 대책」
2023. 1. 19	「이차원 저출산 대책」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첫 회합
2023. 1. 23	제 211 회 정기 국회 소집(~6. 21), 기시다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
2023. 2. 28	인구동태통계속보(2021 년 12 월분)(후생노동성 공표)(출생수 80 만명 이하)
2023. 3. 31	아동육아정책 강화에 대하여 (시안) ~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실현에 대하여~(관계부처 회의, 어린이 정책 담당 대신)(가속화 플랜 포함)
2023. 4. 1	어린이 대강령·어린이 기본법 시행, 어린이 가정청 창설
2023. 6. 2	2021 년 인구 동태 통계 월보 연계(개)의 상황(후생노동성 보도 발표)(출생수 77 만 747 명/전년 81 만 1622 명보다 4 만 875 명 감소. 출산율(인구 천명 대비)은 6.3/전년 6.6 보다 저하. 합계 출산율 1.26/전년 1.30 보다 저하)
2023. 6. 13	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결정(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)
2023. 6. 16	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3(기본 방침 2023/국무회의 결정)(저출산 대책·어린이 정책의 발본 강화 포함)

세대의 소득을 늘리고 ②사회 전체의 구조·의식을 바꾸며 ③모든 육아 가정을 끊임없이 지원한다」는 3 가지를 정하고, 향후 3 년간에 임하는 「아동 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」을 책정하기로 했다. 내각 관방의 전세대형 사회 보장 구축 본부 산하에 「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」를 개최하여 6/13 전략 방침을 결정하고, 6/16 기본 방침 2023 에 포함시켰다.

3. (결혼·) 임신·출산으로부터 고등 교육까지의 일체적·종합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·무상화

국회 회의록에서 「소자화 and 무상화」로 검색되는 제 210 회: 30 건·206 개소, 제 211 회: 112 건·1,294 개소에서 논란의 경향과 특징을 찾았다. 제 210-211 회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라는 것도 있어, 각 당의 공약을 근거로 한 국회 심의가 두드러졌다. 단체의 무상화 대책이 아니라, 저출산 대응으로서 「(결혼·)임신·출산으로부터 고등 교육까지의 일체적·종합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·무상화」를 내세우는 형태로 파고든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. 각 당의 공약을 포함하여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- 자유 민주당 「극진한 저출산 대책·육아 지원을 실현한다」 긴급 대책으로서의 결혼·출산 지원, 대담한 아동 수당이나 육아 휴직 급부의 확충, 보육 등 육아 지원, 방과후 아동 클럽의 확충 등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/고등 교육에 있어서 다자녀 세대 등 중산층에 대한 수학 지원을 확충해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원에 선행 도입.

- 공명당 「육아·교육을 국가 전략으로」 「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「교육 입국」출산 육아

일시금(42 만엔)을 증액, 0~2 세 아동 가정의 산후 케어 전국 전개, 자녀 의료비 조성 확대(고 3 까지 무상), 장학금 상환 부담 경감, 장학금 반환 지원 제도의 전국 전개, 수학 지원 신제도를 중간 소득 세대까지 확충.

· 입헌 민주당 「킬드런·퍼스트로 경제적 지원 확충과 예산 확보」 대학등 등록금 무상화, 학교 급식 무상화, 고 3 까지 모든 자녀에게 아동 수당 15,000 엔, 관련 예산 대 GDP 대비 3%대(현상의 배증 現状の倍増).

· 일본 유신회 「출산 무상화×교육 무상화. 미래 세대에의 투자 철저」 출산 관련 의료에의 보험 적용+출산 육아 바우처의 지급으로 출산의 실질 무상화 실현, 교육 전 과정의 무상화, 급식 무상화.

· 국민 민주당 「『사람 만들기』야말로 나라 만들기」 육아·교육 지원책으로부터 소득 제한 철폐, 학교 급식·교재비·수학 여행비 무상화, 고등 교육 수업료 감면, 급부형 장학금을 중소득 가구에도 확충, 교육 국채 창설.

· 일본 공산당 「육아·아이에게 「냉정한 나라」에서 「친절한 나라」로」 아동 수당 전원 지급, 18 세까지 의료비 청구 부담 무료, 0 세부터 보육료 경감, 급식비·교재비 제로, 학비 반감, 입학금 폐지, 급부 장학금 확충.

· 레이와 신선조 「대학원까지의 교육 무상·장학금 변제 면제」 「아동 수당 매월 3 만엔으로」 (고교 상당 연령까지).

결론. 무상화 방안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: 저출산 대응의 3 층 구조와 원활하고 토탈적인 지원책

기시다 수상이 「유아 교육, 보육 무상화, 고교 등 등록금 지원, 고등 교육 무상화」를 설명구로 하고 있는 것을 회의록에서 엿볼 수 있다. 그러나 0~2 세 아동으로 무상화 대상(주민세 비과세)이 되고 있는 것은 10%, 고등 학교 등 등록금 지원으로 소득 제한(연봉 기준 910 만엔 이상)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약 20%, 고등 교육 무상화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(주민세 비과세~연수 기준 380 만엔 미만) 것은 약 15%라고 알려져 있다. 「끊임없는 지원」이라는 용어도 국회 심의에 등장하게 되었지만, 현실은 원활하고&토탈적인 지원책은 되고 있지 않다. 저출산 대응은, ①육아와 취업·소득 보장의 양립 ②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③육아로 인한 심리적 부담 경감·사회 협동적 지원의 3 층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한다. 「육아 형벌」이라는 용어가 2020 년 제 203 회 회의록에 첫 등장해 제 211 회에서는 11 건·13 개소로 증가하고 있지만, 미봉적인 가짜 무상화 정책으로는 저출산 트렌드를 끊고 반전시킬 만한 임팩트는 없다.